

대통령의 휴가와 물리학 책

하창식 (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2000년 우리나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자연계열 지원자는 25만 6천명으로 전체 지원자 87만 2천명의 29.4%에 불과하였다. 이는 6년 전의 34만 5천명에 비해 25.8%나 감소한 수치로서, 이러한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은 미래의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일이다.

이공계 위기라는 말이 인구에 회자되는 요즘 지난 30여 년을 되돌아보면 이공계 출신에게는 그래도 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 가장 행복했던 것 같다. 물론 유신 독재로 우리나라의 민주화 발전에 발목을 잡은 역사적 과오는 크다. 하지만 그 분이 과학기술 입국을 외치며 이공계 출신 인재를 국가경제 발전의 중심 축으로 대접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박 전 대통령은 70년대 초 KIST와 한국과학기술원 (지금의 KAIST)을 설립해 우리 과학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크게 높였다. 과학기술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다. 특히 대덕연구단지의 설립은 많은 과학자들에게 자신의 전공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무한한 긍지를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해외의 우수한 과학자들이 서둘러 귀국하고 싶어했을 정도다. 한마디로 장래에 대한 금전적 보상 못지 않게 연구 풍토를 진작시키는 다양한 보장책을 충분하게 제공했다.

70년대 초반 한국과학기술원은 모든 이공계 학생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음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병역 면제의 혜택에다 학비 전액을 국가에서 보조하고 나아가 진로까지 보장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국내 과학기술계를 이끌어 가는 40~50대 중심 인력은 한국과학기술원 출신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연히 이공계 학생들은 과학기술자의 자부심을 가지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공계 출신은 자신의 장래를 불안하게 여길 만큼 초라한 신세가 됐다. 신분은 불안정하고 돈도 많이 벌지 못한다. 게다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니 한마디로 서글픈 사회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공계의 위기를 불러 온 가장 1차적인 책임은 물론 현실에 안주해 온 이공계 대학들의 교육개혁 노력 부족과 중등교육에 있어서의 청소년들에 대한 올바른 과학교육의 부재와 같은 교육적 요인에 있으며, 2차적으로 이공계열 졸업생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는 사회적 요인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공계 위기를 치유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안은 당연히 중, 고등 학생들이 과학에 흥미를 가지도록 유도하는 교육의 역할이다. 어린 학생들이 과학기술에 흥미를 가지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이공계 대학으로 진학하고자 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취감을 통해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보람이 더욱 중요하다는 페스탈로치 교육이념이 저절로 실현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공계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게 필자의 소신이다.

이런 점에서, 내년부터 예정되어있는 제 7차 교육과정의 본격적인 도입은 이공계의 위기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학생들에게 학습선택권을 부여하여 선진국형 교육을 실시한다는 목표는 그럴 듯하게 들리지만 허울에 불과하다. 어느 학생이 골치 아픈 수학이나 과학과목을 수능과목으로 선택할 것인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우수한 성적과 일류대학에의 진학이 최종적인 목표인 고등학교 학생들이 점수 따기 쉬운 과목을 선호하는 현실은 불가피할 것이다.

때문에, 이공계 과목의 가장 기초가 되는 수학과 물리, 화학, 생물 등은 그 중에 한 두 가지를 선택하게 해서는 안되며 모든 과목을 충실히 이수하도록 가르쳐야 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도 그렇게 뒷받침되어야 근본적으로 이공계 위기라는 말이 사라질 수 있다. 기초과학의 착실한 교육 없이 어떻게 과학기술입국의 백년

대계를 이룰 수 있는가?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기초체력향상에 심혈을 기울인 히딩크식 교육의 정당성은 월드컵 4강으로 증명이 되었음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기초 과학과목에 대한 강제적 이수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공계 대학이 살고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 우선 국민들에게 헛된 희망을 줄 수 있는 약체팀들과의 평가 전 대신 5대0이란 비난을 무릅쓰고도 착실히 기초체력훈련을 시키며 유럽강호들과의 평가 전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왔기에 히딩크는 우리축구를 4강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이공계 위기를 불러 온 사회적 요인을 생각해보자. 우리는 80년 서울의 봄 이후 사회 각층에서 분출된 민주화 운동의 엄청난 파고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인문계 출신들이 민주주의 발전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기여하면서 이공계의 입지가 위축됐다는 분석이 있다. 또 IMF 외환 위기를 거치며 사회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하자 부와 명예가 동시에 보장되는 의사나 변호사를 선호하는 현상이 만연한 결과로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화됐다는 해석도 나왔다. 여하튼 이공계 위기는 이공계 진학률이 하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공계 학생들조차 고시촌에 몰려드는 기막힌 상황에 놓여 있다.

현재의 이공계 공황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 장래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폐해를 끼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미 20여년 전부터 ‘기술 패권주의’에 대한 경고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은 무얼 말하는가. 결국 과학기술의 발전 없이 국가 경쟁력 체고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뜻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기술고시 선발 비율을 대폭 높이고 이공계 지원 학생에게 대폭적인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는 등 이공계 지원 정책이 속출하고 있다.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다. 그러나 정책 당국은 이것이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가령 이공계에 대한 고시 혜택의 확대는 학계, 연구소, 산업현장으로 가야 할 우수한 두뇌를 오히려 고시촌으로 몰리게 하는 역기능을 할 수 있다. 결국 장기적으로 이공계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로도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일부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다.

과거 경험에서 볼 때 최선의 이공계 진흥책은 박 전 대통령 시절처럼 최고 통치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과학기술자의 권익 신장이나 이공계 위기 타파에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 이런 점에서 80년 이후 전직 대통령들은 이공계 위기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다. 정치관이나 언론관 등등. 그 분에 관한 정확한 평가는 역사의 몫이겠지만, 우리 같은 과학기술자들이 바라는 바는 아주 간단명료하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고 박 대통령만큼만, 과학기술자들이 국가발전에 대한 자신의 역할에 대해 긍지와 보람을 느끼게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최근에 이공계 대학교수와 연구소 연구원 등 4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 중 불과 22%만이 다시 과학기술자가 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40.4%는 법조인이거나 의료인으로 전직하고 싶다고 한다. 과학기술자들마저 이런 회의감에 젖는 세태라면, 무슨 희망으로 이공계의 부활을 꿈꿀 것이며 70년대와 같이 국가발전에 대한 열정을 다시 꽃피울 수 있을 것인가?

지난 여름, 휴가를 다녀온 노 대통령이 물리학을 포함해 5권의 책을 휴가지로 가져갔다는 소식은 그래서 고무적이다. 민생 경제를 챙기는 것 못지않게 제 2의 과학기술 입국에 대한 정책 구상도 국가 발전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가까운 장래에 휴가 기간에 읽은 물리학 서적에서 영감을 얻어 이공계 종사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신나는 정책이 담긴 폭탄(?) 선언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cscha@pusan.ac.kr)